

종합·국제

초중고생 700만명 봉파… 교원은 늘어

2011 한국 사회지표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가 700만명 선으로 처음 내려갔다. 교원 수는 43만2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0년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보다 1.2% 줄었으나 강간 범죄는 23%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기준의 통계자료를 가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초중고교생 698만7000명…초등교사 100명 중 76명이 여성=2011년 초중고교생 수는 698만7000명으로 1991년 920만2000명에서 20년 새 31.7% 감소했다. 특히 20년간 초등학생 감소폭이 34.2%로 가장 커고 고등학생은 13.7%, 중학생은 16.8% 줄었다.

지난해 초중고교 교원은 42만2000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3명으로 20년 전보다 17.1명이나 줄어 중고교보다 감소폭이 커다.

초등교사 중 여성 비중은 1991년 51.6%에서 지난해 75.8%까지 늘었다.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2.5%로 1991년(33.2%)보다 배 이상 늘었으

범죄 줄었지만 강간 사건 23% 급증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100만명 육박

나 2008년(83.8%)을 정점으로 3년 째 하락했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75.0%)은 남학생(70.2%)보다 높은 상황이 3년 째 이어졌다.

◇고령자 의료비 비중 31.6%…장기체류 등록외국인 100만명 육박=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0년에 31.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10년 새 14.2%포인트 급등했다.

2000년 247개였던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2010년 4150개로 늘었다.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인구는 지난해 98만2461명으로 전체인구의 1.97%를 차지했다. 1990년 4만9507명에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990년 32.3g에서 2010년 52.9g으로 증가했지만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은 같은 시기 327.6g에서 195g으로 크게 줄었다.

2010년 도로는 10만5655km로 1990년 5만6715km의 광활만큼 길어졌다.

/연합뉴스

선거구 쪼개져 지역기반 잃고도 선전

이개호 '아름다운 경선 승복'



자' 되고 있다.

답양·곡성·구례 선거구가 쪼개지면서 답양을 제외한 지역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이 전 부지사에게 이번 경선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또한, 선거인단 경선은 그에겐 불공정 경선이나 다름없었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선거구를 쪼개고, 그것도 경선 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이 전 부지사가 영광·함평·장성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

이다.

그런데도 이 전 지사는 당당히 경선에 임했고, 4500여 표를 획득했다. 그는 15일 '지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승리한 이나연 후보에게 축하 인사드리며, 선전한 이석형 후보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보내니"며 "경선결과를 겨우히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민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고,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소수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가치에 함께 해준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국민의 건강과 안정,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道선관위, 검찰에 고발

전남도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광주일보 15일자 3면)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50분께 영광군 영광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민주통합당 경선 투표과정 중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영광 선관위 이모(55)지도경장의 카메라를 부수고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무안군수 후보경선 투표장 인근의 CC-TV 2대에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마친 뒤 돈 봉투를 나눠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제보받아 사실 확인작업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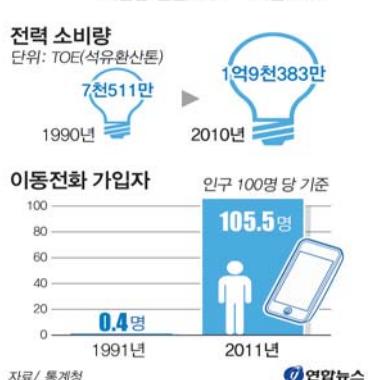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시·전남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광주·전남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부 고발자 불이익 없애고 신변보장

권익위, 광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광주 5·18 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한마디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본다.

◇실시 배경=그동안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분 누설 금지'와 같은 선언적 조항만 존재함에 따라 불이익 우려에 따른 내부 고발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자제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보장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

◇신고 대상=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180개의 공익 침해 대상 법률이 정해져 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 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등이다. 즉, 180개 법률에서 규정해 놓은 위반 행위가 바로 공익침해 행위가 된다.

◇신고 방법=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이름, 주민 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 침해 대상자와 공익 침해 내용과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와 관련, 금품이나 근로 계약의 특혜 등의 목적으로 신고한 경

우는 공익 신고로 보지 않는다.

◇보상금과 구조금=보상금이나 구조금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있어야 하며 불복 제기 기한이 경과되어 대법원의 판결 등이 확정돼야 한다.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전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겪으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구조금을 받게 된다.

유체적, 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 기간의 임금 손실, 생활 절차에 소요된 비용, 그 밖의 경제적 손해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권익위는 보상금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시라이 충청시 서기 전격 해임

中, 계파간 권력투쟁?

후임에 장더장 부총리

최근 왕리쥔(王立軍)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충청(重慶)시 서기가 해임됐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은 14일 보시라이를 충청시 서기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임명키로 결정했다.

충청시 서기 등 충청시 관련 직위에서 해임됨에 따라 보시라이는 당분간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직만 갖게된다.

보시라이는 왕리쥔 사건 이후에도 흥색행보를 지속하고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등 건재를 과시하면서 한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

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4일 열린 양희 페막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보시라이는 반성해야 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조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보시라이가 해임됨에 따라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대자당의 일원인 보시라이의 낙마로 중국 핵심부의 권력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권력 이양을 앞두고 각 계파간 치열한 권리투쟁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민관·변산반도 펜션 전문)

복합상가(매매)

부동산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평)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월 121평 평당 1,730만원(21평) 보증금 2억